

을지병원 “간호사 사망에 책임 통감”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최근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된 계약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을지대병원은 29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약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우선 병원은 간호사 업무의 서면 인수인계를 활성화하고 병동 순회 당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동 지침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계약서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삭제했다.

또 경력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한편 부서 운영·복지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사망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1년 동안 퇴사·타 병원 이직 불가’

논란 제기 계약서 특약 조항 삭제

복지 등 병원 내 조직문화 개선 나서

스 등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배포, 신규 직원의 후견인 선택제 신설, 고충 처리 전담 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원 내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은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선부른 발표로 제2, 제3

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별도 발표 없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수사 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윤병우 의정부유지대학교병원장은 “직원의 불행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 병원 신입 간호사인 A씨는 지난 16일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 측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이른바 ‘태움’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광수 기자

구리하수처리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본격 가동

분리막공법 무송풍 세정방식 적용

전력·온실가스 배출 80%이상 줄여



구리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설비.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구리하수처리장 분리막공법에 무송풍 세정방식을 적용한 수평 왕복 구동형 세정설비를 설치하고 1개월간의 시운전을 끝내고 지난 20일부터 본격 가동에 나섰다.

구리하수처리장은 분리막공법을 통한 일일 2만5000t의 제이용수를 생산해 지역 내 도로 자동청소시스템, 실개천 장자못 등 하천유지용수, 도로살수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막 세정을 위해 송풍기를 운영하는 방식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경기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구리하수처리장에 Test-bed(시험대)를 구축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검증을 진행하여 환경부 환경신기술 및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2021년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700만 원을 확보해 지난달 구리하수처리장에 수평 왕복 구동형 세정설비 설치를 마쳤다.

설치 후 1개월간의 시운전 결과, 기존 송풍

형 세정설비 대비 일평균 1.3MWh(연간 475.5MWh)의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80%(218t/CO₂ eq)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있어서도 친수용수 수질기준(BOD 3mg/l 이하, T-N 5mg/l 이하, T-P 0.1mg/l 이하 등) 전 항목을 만족함으로써, 처리 성능에 있어서도 기존 분리막 공법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확인했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물산업 실증화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영상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통해 구리하수처리장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단순 하수처리기 아닌 선진화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그린뉴딜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故 노태우 전 대통령,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묘역 조성

파주시, 국가장례위 안장 절차 협조

지난달 26일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지가 파주시 통일동산 지구 내 추모공원으로 결정됐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29일 노 전 대통령 장지를 동화경모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한 시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 유언을 지키고, 고인이 평소 언급했던 ‘보통사람의 시대’에 합당한 묘역을 조성하고자 결정을 내려주신 유족들의 뜻을 진심으로 존

중한다”며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 노 전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엄수되고 고인이 파주에 임시 안장된 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파주시는 국가장례위원회 및 유족들과 고인 묘역 조성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또 “고인이 영면할 동화경모공원은 통일동산 지구 내에서 자유로와 임진강을 마주하고 있으며 북녘땅이 한 눈에 보이는 장소로써 이북5도민과 파주시민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이라 그 의미가 한층 더 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인이 평화의 땅 파주에서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기원하며 영면할 수 있도록 국가장례위원회 및 유족분들과 안장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동화경모공원은 이북도민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해 1995년 통일동산지구 내 조성됐다. 노 전 대통령이 안장될 곳은 동화경모공원 내 맨 위쪽 전망휴게실 옆 부지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는 한강과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이 눈으로 보인다.

최연식 기자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무인 교통장비 추가 설치

군포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금정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17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중앙공원 사거리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유도등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 위반과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장

비’ 설치 장소는 이로써 모두 22개 초등학교 주변 35곳(학교당 1.59대)으로 늘어났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신호등’과 밤이나 기상이 악화했을 때도 쉽게 횡단보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이 설치됐다.

시는 교통안전장비 설치 효과를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빈발 장소 등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순철 기자



군포시가 중앙공원 사거리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바닥신호등 및 활주로형 유도등을 설치했다. 군포시 제공

남양주시 “道, 무더기 징계 요구는 보복행정”

道, 행감 방해로 市에 16명 징계 요구

“법에 따라 자치감사 방해행위 아냐”

市, 법원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남양주시는 25일 지난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를 했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굳이 명절 전날 통보한 것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시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다루는 의미도 있으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가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다루는 행정소송과, 시의 기관경고 등에 대한 소송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했으며,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11월 12일 인용결정을 내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화우 기자

즐거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들을 꿈꾸게 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을 꿈꾸게 하는 즐거운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경험해 보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미있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아가 참여하는 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 신고를 한 활동인지 꼭 확인하세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송죽동) 2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TEL 031)232-9383~5 FAX 031)232-9388 홈페이지 www.gysc.or.kr

SNS www.facebook.com/kgysc
블로그 blog.naver.com/kgyvc

